청년 정책을 확대해야 할 때

김 상 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낮은 출산율의 핵심 요인이 비혼과 만혼이며, 청년 실업과 빈궁함이 비혼과 만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국가에서도 골치 아픈 정치 이슈로 자리매김하였다. 청년 실업은 프랑스에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면서 주요 선거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고, 청년 빈곤은 여러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잘 정착된 선진국에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만 청년은 주로 독립 가구 형태로 거주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빠지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아 노인 빈곤율이 높은 반면, 청년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청년 실업의 문제가 곧 빈곤의 문제는 아니어서 그동안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청년 실업률이 9.8%,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3000명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 청년 실업률을 측정할 때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같은 은폐된 실업자를 포함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이 100만 명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1만 1000명을 뽑는 2016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생이 21만 명을 웃돌아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청년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가장 큰 요인이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가 취업 시장에 진입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우리 경제가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어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우리 경제가 청년들이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수가 2016년 6월 기준 96만 2000명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족한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이다. 청년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은 대학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6년 기준 77.6%로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대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전공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 특히 현 정부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장학금제도에서 소득 8분위까지 차등하여 최대 연 5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공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실 대학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 낮은 탓에 과도한 대학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부실 대학의 퇴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실 대학 퇴출을 포함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전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교육정책도 곧 청년 정책임을 주지하고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와는 달리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교육 및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은 주거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는 청년이 직면하는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높은 주거 비용을 야기한 중대한 원인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때의 내수 진작 정책처럼 역대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에서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소득계층 간 이동성이 떨어지면서 독신 청년과 부부 청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여유진(2016)의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에 따르면 독신 청년의 처분가능소득 상대배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청년 부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상대배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스펙에 따른 결혼시장의 양극화, 동질혼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축적의 시너지 효과가 강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혼을 통한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청년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보다 15% 증액한 2

조 7000억 원을 책정하였다. 이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주로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었던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은 진일보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인턴 등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청년고용지원 사업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5~64세 고용률이 2012년 64.2%에서 2016년 66.1%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노동개혁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목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장시간 근로의 단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절실하다.

청년 정책의 관점을 대학교육과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및 훈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 실업 대책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인 청년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